

전주시, AI 농업인 육성 확대 먹거리 인프라 구축·폭염 대응

시 농기센터 정례브리핑...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안전 위한 정책 차질없이 추진”

전주시는 인공지능(AI) 시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여름철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8월 정례브리핑에서 AI 활용 농업인 양성, 농업 인프라 구축, 폭염 대응,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까지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파머’를 육성한다.

교육은 유튜브 활용법과 생생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농산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실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우수 교육생에게는 심화교육을 실시해 ‘농민이 농민을 가르치는’ 현장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농촌마을과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고령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AI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확산에 나서게 된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 시설인 3대 농업 인프라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공정을 40%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이 시설은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물류 거점 역할을 맡는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4억6,800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을 9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공 창업에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기계 임대 분소도 지난해 7월 건물 준공 이후 내부 시설 정비와 농기계 구입을 마무리하고 9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고가 농기계 구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8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입이 어려운 소규모·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 등 3개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염 특보 발표 시 현장 대응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 예방활동 84회, 안전 교육 23회를 실시했으며, 안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폭염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 25곳과 양식장 7곳을 대상으로 폭염 및 호우 대비 사전 점검을 마치고 냉방시설 등 온도 저감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과 노지재배 농가 시설하우스 작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을 생수를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6월 오후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도 강화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만 3천 476필지를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8,582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은영 소장은 “기후변화와 AI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의 안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98차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협의회장에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을 추대했다. 사진은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회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동현안 해결 앞장” | 전북시군의회의장협회장에 최주만 전주시의장 추대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지역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에 추대됐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98차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협의회장에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을 대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연계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간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전북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룰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군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최주만 신임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임원진도 함께 구성했다. 상임부회장에는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과 이현기 부안군의회의장이 추대됐으며, 감사에는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과 성중기 완주군의회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를 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게임 끝났다” vs “내가 과반”

정청래·김민석, 박병 전대 서로 우위 주장

민주 전대, 박병 양상... 당권 주자들, 대세론 형성 공 들어
3위 송영길, 호남 공략 매진...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박병 양상으로 흘러가며 당권 주자들이 대세론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강인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서로 우위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정 후보는 6일 SNS를 통해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며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 했고, 단일 종북레바라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했다.

이따라 윤리 기사물에서도 2차 TV 토론을 거론, 재차 “게임 끝났다”라며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양강 경쟁자인 김 후보 견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두고는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윤리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 말을 정청래가 했어도 윤리감찰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반명(反明) 공세에는 “8·17 전당대회 이후 다 단합하자고 하면서 실제 벌어지는 양상은 반명으로 낙인찍어서 배제를 자구

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경기 장애인협회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간담회’에 참여했다. 오후 7시에는 경기 부천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진행, 수도권 표심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다.

김 후보도 같은 날 김여준씨의 유튜브에 출연, 이번 주말 순회경선 권역인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에서) 비기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전에서 비기면 호남에서 한 표 이상은 분명히 이길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그 여세로 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에서 (득표율) 50%를 넘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첫 주 순회경선에서 충청권은 승리, 부산·울산·경남은 패했다.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45.51%로 44.52%인 김 후보를 앞선다.

그는 이날 8·17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 호남 당심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전남광주 순천 대학교에서 “이곳(호남)에서 힘 있

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론조사 추세를 그대로 더 크게 더 확장시켜 표로 연결해 줘서 승리의 대세를 만들어 주셔야 수도권까지 가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후에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누적 3위인 송영길 후보도 호남 공략에 매진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전남광주 진도와 해남 사이 해협이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배경인 울돌목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을 두렵게 한다”고 썼다.

송 후보는 “저 송영길에게도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명량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물길을 이는 자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그는 “장군에게는 40일이 있었고, 저에게는 열하루가 있다”며 “울돌목 역전, 저 송영길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남의 경제는 호남의 정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며 “호남의 정통을 세울 송영길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뉴스



중국 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구정치(顧景奇)’ 주광주 중국총영사 일행을 만나 전북과 중국 간 교류 협력 확대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도의회, 주광주 중국총영사와 교류협력 확대 논의
“장우성 인대 자매결연 30주년 교류 성과 체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6일 의장실에서 ‘구정치(顧景奇)’ 주광주 중국총영사 일행을 만나 전북과 중국 간 교류 협력 확대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수 의장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에 주신 총영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의회는 장우성 인민대표대회의와 자매결연을 비롯해 운남성 인민대표대회,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등 중국 여러 지역과 꾸준히 교류하며 신뢰와 우호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장우성 인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양 지역 주민들이 교류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정치 총영사는 중국 장우성 출신으로, 하이난성 산야시 부시장 및 주튀르키예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주광주 중국총영사로 재임 중이다. /이만호 기자

받혔다.

또한 “전북과 중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광주 중국총영사님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구정치 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지역 간 교류가 더 확대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88년 중국 장우성 인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1년 운남성 인대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과 국제 교류 행사를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구정치 총영사는 중국 장우성 출신으로, 하이난성 산야시 부시장 및 주튀르키예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주광주 중국총영사로 재임 중이다. /이만호 기자

2026년 전북지역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과정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육성철, 이하 사무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함께 2026년 전북지역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과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지역 내 인권옹호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조직문화 만들기 훈련을 통해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센터 ‘돌’의 이모강, 배경내 활동기와 함께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와 함께 하는 ‘무지개를 변호하다: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의 삶과 생각 북토크’가 이어진다. 북토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폭염 화재위험 대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최근 폭염으로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1,85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은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언어와 생활환경 차이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되며, 공공형 숙소 29개소와 농가형 숙소 1,822개소를 대상으로 숙소 유형별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공공형 숙소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시설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요령과 화재예방 컨설팅을 병행한다.

농가형 숙소는 9인 이상 거주하는 11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요인, 멀티탭 과부하, 노후 전기배선, 취사시설 안전관리, 피난환경 등을 중점 점검하고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연계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19 신고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19 대체제 신고 및 통역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6개 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리플릿을 활용해 맞춤형 화재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농생명정착과와 협업체계로 계절근로자 숙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화재위험 대상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와 정기점검을 연계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